

제2장 국가 중기재정운용 여건

1. 최근 경제상황¹⁾

□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세는 점차 개선

- OECD와 세계은행(WB)은 '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2.7%, 2.1%로 기존 전망 대비 0.1%p, 0.4%p 상향 조정(OECD·WB, '23.6.6.~6.7.)
-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OECD, '23.6.7.)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2) 7.8 → ('23) 6.1 → ('24) 4.7

□ (국내경제) 하반기 이후 경기여건 개선 예상, 다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

- 국내경제는 ('23년) 1.4%, ('24년)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Delta 0.2\%p$, $\Delta 0.1\%p$ 하향 조정(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3.6.30.)
- ※ '23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23.4.)) 1.5, (OECD('23.6.)) 1.5, (한은('23.6.)) 1.4
- 하반기 이후 소비 회복세 지속 및 IT 경기 완화 등 수출 개선에 따라 경기 부진 완화가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전망
- 소비자물가는 '23년 중반까지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그 이후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

< 한국경제 주요 지표 전망(% , 6.30. 기준) >

	'22년	'23년	'24
경제성장률	2.6	1.4	2.3
민간소비	4.3	2.3	2.4
재화수출	3.4	0.4	3.3
소비자물가	5.1	3.5	2.4

1) OECD Economic Outlook('23.6월), WB Global Economic Prospects('23.6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3.4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3.6월)

2. 국가 재정 운용 방향²⁾

1.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재정기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3년 예산편성시 그간의 확장재정을 건전 재정기조로 전면 전환, '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 지속 견지

< 건전재정기조의 의미 >

- 무조건적인 지출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되,
-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중점 투자방향) ①약자복지, ②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③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투자

① 약자복지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사회적 약자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을 이루는 복지

②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기술 혁신, 국가 전략산업 육성, 수출·투자·창업 활성화 등에 적극 투자

③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기능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뒷받침

□ (재정 혁신방향)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

- 국고보조사업 엄정 관리, 사회보장급여의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등 추진

2)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기획재정부, '23.3월)

2. 4대 투자중점 및 3대 재정혁신

□ (4대 투자중점) ①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②민간 경제활력 제고, ③경제 체질·구조 혁신, ④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①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확대 등 두터운 지원

- (약자복지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등
- (일자리)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민생안정) 주거·의료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② 수출과 스타트업 중심의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수출드라이브)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원전·방산 등 新수출동력 확충
- (스타트업 코리아) 디지털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육성 등
- (신산업 육성) 신성장 4.0 전략* 지원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 ①미래형 모빌리티, ②독자적 우주탐사, ③양자기술, ④미래의료 핵심기술, ⑤에너지 신기술, ⑥내 삶 속의 디지털, ⑦차세대 물류, ⑧탄소중립도시, ⑨스마트 농어업, ⑩스마트 그리드, ⑪전략산업 no.1 달성, ⑫바이오 혁신, ⑬K-컬처 융합관광, ⑭한국의 디즈니 육성, ⑮빅딜 수주 플레이

**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모빌리티, ④차세대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수소, ⑦우주항공·해양,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첨단로봇·제조, ⑪차세대통신, ⑫양자

③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미래인재 양성·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확대

- (3대 구조개혁)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재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 (미래인재)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 (지방시대 구현)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④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뒷받침

- (경제안보, 국방) 전략적 ODA 추진 등 경제안보 강화 및 비대칭 전력 대응·장병훈련 과학화 등 국방역량 제고
- (보훈 등)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가 정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는 일류보훈 체계를 구축하고,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 강화
- (안전) 마약 등 민생범죄에 대한 예방·대응 강화, 생활안전 투자 확대

□ (3대 재정혁신) ①지출구조 혁신, ②재정사업 관리 강화, ③투자재원 확충·다변화

-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은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 정비·축소·폐지 등 추진
- (보조금 엄정관리)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 추진
- (의무지출 효율화)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 세금누수 방지
-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
- (민간 활용) 정부와 민간이 연계된 모펀드 등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 적극 발굴
- (국유재산 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개발 등 활용 강화

3. 중기 지방재정 운용여건³⁾

1. 수입 측면

□ (자체수입)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 예상,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 (지방세)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 제출 의무화(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중)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이전수입)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우려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국세수입 전망('23.8월) >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3년 400.5 → '24년 367.4 → '25년 401.3 → '26년 423.2 → '27년 444.9

○ 다만 최근('23년 상반기)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 존재

3)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2024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행정안전부) 등

2. 지출 측면

□ 지출 감소·증가요인 상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백신·방역 비용,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

○ 다만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 심화

□ 한편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 전망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

○ (지역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 역할 필요

○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기업 지방이전 지원, 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 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이행)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 이행에 따라 복지·교육재정 수요 증가 예상

⇒ 위와 같은 여러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기존 지출구조 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